# "尹정부 '기후워싱' 그만둬야"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현 정부 기후환경 정책 진단 나서

## 전북 현안 관련, 새만금 수질 개선 미비로 정부에 더 큰 노력 당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군)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해 "거꾸로 돌아가고, 녹생경제는 무너졌다"며 윤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기후워싱'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감사에 안호영 위원장은 '숫자로 보는 기후환경 정책'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진단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정을 돌보는 대통령은 'RE100'이 뭐냐고 되묻고, 기후변화 대응지수와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최하위다"라며 "기후위기는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현 정부는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태는 나쁜 기업의 '그린워싱' 처럼 교묘한 '기후워싱'이다"며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는 지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이제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 안 위원장의 "그간 환경부가 진행한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으로 수질이 확실하게 개선됐냐"는 질문에 김완섭 장관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고, 조금 개선됐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현재 새만금 저층부에서는 생물폐사와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며, 14일 국회 환노위 위원들이 함께 직접 새만금 현장을 찾아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 큰잔치**

9일 훈민정음 반포 578돌을 기념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에서 '2024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 내 체험부스에서 한글 체험을 즐기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정원 축소에 내부 비리 · 직장 내 괴롭힘까지**

#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 '유명무실'

## 민주 한병도 의원 "강도 높은 부패방지 대책 내놔야"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됐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 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지방의료원 도산 위기 앞 돌파구 마련 시급

## 작년 3074억 당시순손실 이어 올 상반기도 1112억 적자… 尹정부 지방의료원 예산 감액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작년에도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 증가하던 지원 예산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 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 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 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이만호 기자

# "공공의료, 돈 문제 아닌 생명의 문제"

## 임종명 도의원, 도정질문서 남원의료원 운영문제 집중 추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지난 8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남원의료원 운영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던 사태를 언급하면서, 경상남도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폐원됐던 진주의료원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경영 적자라는 단순 논리로 공공의료원의 폐원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김관영 지사의 지방의료원 운영 정책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원의료원은 군산의료원과 달리 동부권 거점 의료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와 주변 동부권 시군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의료 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남원의료원은 응급실이나 분만실 운영 등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누적된 적자 규모까지 더하면 재정압박 수준은 더 심각하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23시간, 36일 상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고, 보호자 없는 안심 병상 확대와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과 운영, 장애인 진료 등 확대해야 할 필수 의료서비스 영역은 많은데, 적자 걱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도가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되어 남원시비 없이 전액 도비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전액 도비 부담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자보건법이다. 2021년 말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주체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남원에 들어설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부권 주민들 모두를 위한 시설이고, 동부권 시군이 도내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직접적인 설치 및 운영주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고 운영비 부담도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장연국 도의회 민주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민주 대표단 정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8일 도의회 귀빈접견실(2층)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최종현)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대표의원과 전용태 수석부대표, 윤영숙·임종명·정종복 부대표 등이 참석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방문을 환영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이 정담회에 함께해 자리를 뜻깊게 만들었다.

정담회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및 조직권이 인정되지 않고 지방 의회법조차 제정되지 않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대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광역의회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은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명재성 정무수석, 남종섭 전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했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